

이인영 “한국당, 서훈-양정철 만남으로 강효상 물타기 말라”

“기자 있는데 선거 논의 상상불가…총선 전략 묵인하겠느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에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원원장의 사적 만남을 빌미로 황교안 대표의 군대 실언, 강효상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 사건을 물 타기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두 사람)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선거문제를 논의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며 “과연 기자가 있는 곳에서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거듭 물타기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보라. 만약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총선 전략과 관련한 내밀한 이야기가 오갔다면 둑인하겠느냐”며 “그걸 고발하는 게 정직한 기자의 양심 아닌가. (한국당 주장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건 여러분 스스로에 대

한 모독 아니라, 대한민국 기자들은 그런 면에서 매우 정의롭게 행동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농담조로 말실수한 것도 아프게 찌르고 들어 왔다. 기자사회에는 정의로운, 엄정한 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활 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활 대표가 말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민생이나 아니면 대권놀음이나, 아니면 국회파탄과 의회주의 붕괴나”면서 “국회에 복귀하지 아니면 정외부전 시즌2를 갈지 분명히 대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정상화 없이는 민생 정상화도 없다. 국회는 파탄내고 말로만 민생을 거듭 이야기하면서 또 입법과 예산을 거론하면 그간 형성적인 위원의 정지”리며 “한국당이 선거법을 수용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 사과하라는 요구는 가능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 국회 정상화에 괴도한 전

제 조건을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논란에 휩싸인 강효상 의원에 대해 검찰 고발에 이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강 의원의 국기 문란과 한국당 비호는 실망을 넘어 자괴감마저 든다. 외교·안보를 위협하고도 국민 알권리라는 명령어리를 삼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원칙대로 사안을 엄중 대응하겠다. 국회의원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강 의원에 대한 출당·제명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그게 한국당이 한미동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민주당, 한국당 강효상 의원 징계안 제출 민주당 표창원-김영호 원내부대표 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한국당 강효상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평화당 “6월 국회도 파행 시 ‘일하는 국회법’ 추진”

“국회 열리고 회의 참석하면 수당 지급하는 내용”

민주평화당은 5월 임시국회 개회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등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6월 국회까지 파행으로 이어질 경우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여전히 집권여당과 제1야

당의 ‘네 달’ 공방으로 6월 임시국회 개회도 오리무중이다. 도무지 협치와 양보는 찾아볼 수 없다”며 “오직 민생을 위해 양·대·정당끼리 눈치싸움은 그만하고 통·큰 결단을 내리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과연 민생 회복을 위해 국회를 정상화할 의지는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약 6월 국회

마저 파행된다면 평화당은 입법조사처의 검토를 거쳐 ‘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이를바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겠다”며 “국회가 열리고 회의에 실제 참석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민생을 위해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투쟁을 하더라도 국회 안에서 해야 한다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밥값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강경화·조윤제,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이 출세”

“文대통령, 기강 확립해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조윤제 주미대사는 능력에 비해 출세를 너무 많이 한 분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시집중’에 나와 최근 잇따른 사고로 구설수에 오른 외교부와 관련, 강 장관과 조 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외교부 (사고가) 지금 몇 차례냐. 도처에서 그런 사고

가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기강을 확립하지 않으면 나머지 3년이 어렵다”며 “자기 능력에 맞게 출세를 해야 한다. 너무 오래했고 너무 실수를 떠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차관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인사수석에 김외숙 법제처장을, 법제처장에는 김현준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임명했다. 국세청장에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내정했다.

박 의원은 “어제 인사 발표를 보고 진짜 답답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며 “문 대통령에 국민과 언론이 지적하는 건 인사·경제·외교 세 가지 문제인데 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사 문제가 제일 크다. 그런데 ‘우리 식구끼리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속이 좁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3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문을 열고 객관적인 인사들을 앞으로 더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안·유연합 재가동 ‘정병국 혁신위’ 수용

손학규 “정치공세 절대로 굴복할 생각 없어” 거부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들이(왼쪽부터 김수민, 오신환, 이준석, 하태경, 권은희)이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를 포함한 유승민계(비른정당계)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29일 안철수계가 제안한 ‘정병국 전권 혁신위원회’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여제와 오늘 제안자인

김수민 위원을 비롯한 5명의 최고 위원이 모여서 제안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되었다”며 “정병국 전권 혁신위 인이 현 바른미래당 내분을 수습하고 총선까지 당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유승민계에선 전날까지만 해도 혁신위가 지도부 퇴진을 위한 시간끌기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이전이 표출됐지만, 이를에 거친 회동 끝에 안철수계 제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손 대표는 이들의 기자회견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재차 ‘정병국 전권 혁신위’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원장, 혁신위는 내가 제안했고 혁신위원장은 지난 4월에도 정병국 의원에게 말씀드렸다. 최근에도 접촉했다”며 “정병국 의원이 선선히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이들이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 “정치공세다. 나는 절대로 정치공세에 굴복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소비자가 선택한 2019년 가장 기대되는 브랜드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담양군’

전라남도 담양 ‘메타세쿼이아길’